동시에 풀어야 할 복합함수, 정치적 양극화와 사회적 양극화

남 해 경
한국학중앙연구원

Ⅰ. 한국 양극화의 두 얼굴: 사회적 양극화와 정치적 양극화

우리는 양극화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신자유주의와 함께 사용되어 그것은 빈부의 차이의 심화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되는 말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78만원 세대니 상위 몇%가 대한민국 부의 몇%를 소유하고 있니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어왔다. 더불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양극화의 주원인이라는 이야기를 또한 자주 들어왔다. 그러한 주장은 경제적 사회정의의 각도에서 볼 때 정확하고 정당한 주장이었다.

그러나 양극화에는 단지 사회적 양극화만 있는 것은 아니다. 양극화에는 사회적 양극화와 함께 정치적 양극화가 있다. 정치적 양극화란 좌우의 대립, 보수와 진보의 대립, 여야의 대립 등을 말한다. 정치적 양극화에 대한 얘기 또한 우리는 심심찮게 들어왔다. 정치적 양극화 및 이들간의 대결에 대한 국민의 식상, 그리고 이를 지양하자는 의미에서 나온 "중도"론은 흔히 들을 수 있는 얘기였다. 정치적 양극화의 지양은 건전한 보수와 합리적 진보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보수는 부패하였고, 진보는 합리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반성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사회적 양극화와 정치적 양극화는 각각의 양극화의 문제를 다룬 수준과 양극화의 극복을 위한 대안이 만족스러웠던가 하는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각각 개별적으로 취급되었을 지언정 양자가 동시에 다루어지는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정치적 양극화는 근본적 진단 및 대안없이 "중도"론에서 종료되고, 사회적 양극화는 계급투쟁도 아닌 조세정책을 둘러싼 투쟁에서 종료되곤 하였다. 양자는 각각 개별적으로 다루어졌지만 사회적 양극화의 '가진자와 못가진자'의 이분법에 따른 투쟁은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피아의 이분법으로 정계와 사회를 몰아갔고, 적의 적은 동지라는 태도를 보편화시켰다. 정치적 양극화는 사회적 양극화의 종속변수로 전락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만일 정치적 양극화와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의 성격이 다르고, 각 문제가 국가사회의 문제를 극복하는 데 저마다 필수적인 요소들이라면 정치적 양극화와 사회적 양극화는 동시에 만족시켜야 할 주제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양극화를 얘기할 때 정치적 양극화와 사회적 양극화를 동시에 의식하고 관심을 균형있게 보여주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다. 사회적 양극화문제의 심각성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정치적 양극화는 이미 극복이 되었다거나 아니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일까?

Ⅱ. 사회적 양극화만 문제인가

사회적 양극화라는 말은 경제정의 및 사회정의의 맥락에서 그 자체로 정당한 자기주장을 담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양극화라는 말이 사회적 양극화의 맥락에서 독점될 때 우리는 사회적 시각은 '과잉 대변' 되는 반면 정치적 시각은 '과소 대변' 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사회적 양극화라는 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관심이 정치적 양극화에 대한 관심을 증발시켜 버린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두 개의 양극화에 대한 균형잡힌 접근이 방해를 받게 되는 것이다.

두 개의 양극화에 대한 균형잡힌 접근은 정치와 사회의 관계의 수준에 앞서 국가사회 전체에 대해 적용 속에서 먼저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우리가 철학과 정치와 사회와 문화와 경제와 교육에 대한 관심에 대해 균형을 취하지 않으면 그 어느 것의 부족으로도 나라의 온전한 존속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 서구문명의 역사에서 보면 소크라테스 이전에는 철학과 정치의 구분이 존재하지 않았고, 근대 이전에는 정치와 사회의 구분이 존재하지 않았고, 20세기 이전에는 사회와 구분되는 문화의 독자적인 영역이 분화되지 못했다. 이렇게 분화해 온 각 영역 가운데 어느 하나의 기능상실은 그것만으로도 국가사회의 안위를 위협하게 된다.

이는 마치 신체의 장기 가운데 어느 하나만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해도 신체가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아무리 심장의 기능이 뛰어나다 해도 신장이 망가졌다면 그의 뛰어난 심장이 아니라 그의 기능을 상실해 버린 신장이 문제가 될 것이다. 다른 과목들의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어느 한과목만 과락이 되면 그 시험에 합격할 수 없는 것과도 같다. 그것이 국가사회이건, 신체이건, 시험의 경우이건 우리는 어느 하나만 못해도 망하는 과락의 논리적 영향하에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같은 논리를 양극화를 중심으로 정치와 사회에 대해 사용해도 마찬가지가 된다.

정치와 사회의 불균형은 훌륭한 심장과 빈약한 신장의 관계처럼 되어 대한민국 혹은 한민족이라는 공동체에 심각한 건강장애를 가져올 수 있으며 심지어 생명까지 앗아갈 수도 있다. '사회 과잉'에 '정치 과소'는 국가사회의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필요한 영양소의 불균형을 말해준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사회 '적절', 정치 '적절'의 균형잡힌 국가사회가 되기는 커녕 그 편차는 심화되어 '정치과소'는 정치적 무관심층의 증대 및 국민의 65%에 달하는 '무당층'의 폭증이라는 놀라운 현실만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무소속은 헌정초기에 큰 힘을 발휘했었다. 제헌의회가 탄생하고 근대 서구적 정당정치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무소속의 비중이 높았던 것은 오히려 국가창설기 정당정치 제도화 초기의 자연스런 모습이었다. 그것은 한편으로 정계가 치열하게 정파적으로 조직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특정정파를 넘어 보편적 국민정치인으로 서는 것을 우선시 하여, 정치인 스스로가 지역구 의식이나 정파적 의식보다 국가적 정치인이 되는 것을 선망하던 모습이 남아있던 시절의 아름다운 모습이 존재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6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자체에 대한 혐오가 확산되는 가운데 무당층, 무소속의 폭증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정당정치의 발달이 아니라 정당정치의 퇴조를 말해주는 것이며, 지방자치의 제도적 발전에 따른 정치생활의 전면화와 유급화, 정치인의 증가 등 정치의 외양은 폭증하였지만 국민이 원하는 정치로부터의 거리는 오히려 증가하였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현상이다. 국가적 쟁점에 주목하는 정치인은 줄어들고, 지역이익을대변하는 정치인은 증가하였다는 점을 반영해 준다. 국회의원선거가 되어도 개발공약 문제로 다툴 뿐 국가적 쟁점이 화두가 되는 적은 별로 없는 오늘의 현실은 건국초기의 무소속강세와 오늘날의 무당층의 폭증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럼 정치적 양극화와 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관심이 균형을 이루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는 무엇일까? 그것은 '사회'의 창궐과 '정치'의 죽음이라 간명하게 말할 수 있다. 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집중이 정치적 양극화에 대한 무관심 뿐만 아니라 정치적 양극화의 심화를 조건으로 하는 한 사회 혹은 경제적 관심의 창궐에 비해, 정치적 양극화 및 그로 인한 국민적 일체감의 기반의 상실은 심각한 수준으로 내리달렸다고 할 수 있다. 비유컨대, 지금 우리가 당면해 있는 문제상황은 두 개의 변수를 동시에 풀어내는 복합함수이지 일차방정식의 상황은 아닌 것이다.

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깊은 관심은 이의 지양을 위한 방편으로서의 조세정책 및 복지정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왔다. 빈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국가정책 가운데 조세정책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부동산이다. 부자에게 세금을 더 물리고, 빈자에게 복지를 베푸는 것이 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관심이 낳은 산물이다. 지금

한편으로 이명박정권의 특성으로 인하여, 다른 한편으로 심각한 실물경기의 위축을 배경으로 부동산에 대한 조세정책이 해체의 길을 걷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정책들은 바로 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은 사실이다.

반면 정치적 양극화에 대한 관심의 과소는 정치적 양극화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의 과소를 낳았고, 그에 따라 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관심이 거두었던 '성과'와 같은 것을 정치적 양극화의 장에서는 얻을 수 없었다. 오히려 사회적 양극화의 '성과'는 정치적 양극대립 및 투쟁과정을 거쳐서 얻어지게 마련이므로 사회적 양극화를 문제삼는데 성공하는 경우 그것은 필수적으로 정치적 양극화의 문제의 악화를 수반해 왔다.

Ⅲ. 정치적 양극화의 병폐는 무엇인가

사회적 양극화의 병폐는 빈부의 차이에 있는 것이지만 그럼 정치적 양극화의 병폐는 무엇인가 ?

정치적 양극화는 국가가 정치적으로 분열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국가는 정부나 국가기구가 아니라 정치공동체 혹은 국가공동체를 뜻한다. 그것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이다. 정치적 양극화의 문제는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의 파열 및 그 대립의 심화로 인해 정치공동체 혹은 국가공동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정치적 단위의식, 단위의지, 단위결정, 단위실천이 효과적으로 붕괴되는 문제를 말한다. 한마디로 정치적 헌법적 '우리'의 붕괴이며, 일체감의 상실이며, 공공적 국민의식의 붕괴를 말한다.

그런데 국가가 정치적으로 분열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은 다음의 몇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정치를 국가전체 (정치공동체) 단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둘째, 정치를 국가전체 (정치공동체) 단위로 생각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분열된 경우

셋째, 모든 사람들이 정치를 국가전체 (정치공동체)를 단위로 사고하면서도 지역정치의 맥락 및 정책의 수준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갖는 경우

넷째, 모든 사람들이 정치를 국가전체 (정치공동체)를 단위로만 사고하는 경우

여기서 정치적 양극화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는 첫째와 둘째의 경우이다. 네 번째는 양극화의 문제는 없지만 획일화의 문제가 존재하는 모델로서 한국의 사회분화의 수준에 맞지 않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공동체로서의 국가가 분열한다는 것은 정치공동체가 그 자신을 국회의원이나 국민속에서 재현해 내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의원이 자신을 지역구 이익의 대변자로 자임하고 지역구를 넘어 국가적 수준의 정치의 대변자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게 되면 그 나라는 존재하되 그 나라의 '나라됨'은 실세계에서 작동하지 않게 된다. 만일 국회의원이 정당별로 혹은 한 정당내에서 정파별로 대립하게 될 경우 어느 한편이 국가단위의 정치를 사고하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그 나라의 국가적 기반은 현실 정당정치 속에서 무너지게 된다. 첫째의 경우는 분열의 수준을 넘어 아예 그런 의식의 보유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첫째 수준과 둘째 수준의 중간정도에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첫째 모델은 소위 자치모델이다. 그것은 국가를 단위로 사고하지 않고 오직 생존의 수준에서만 생각하는 모델이다. 이 모델에서는 주권이 필요없다. 구한말 이토 히로부미가 대한제국에 대해 갖고 있었던 모델이 바로 이 모델이었다.

둘째 모델은 국익으로 대표되는 공익과 사익이 대결하는 모델이다. 대체로 공익을 지켜내려는 세력이 존재하는 가운데 사회의 사익을 추구하는 세력에 의해 매수되어 일부 국회의원들이 공익을 유린하는 브로커로 변질된 경우의 정치모델이다. 정당정치의 수준에서 이들 양대세력으로 정치적으로 양극화 되어 있는 경우 그 해악은 심각해질 수 있다.

셋째 모델은 국익으로 대표되는 공익의 관점도 잘 확립되어 있고, 사회의 다원성도 정당정치및 지방자치에 의해 무난히 결합되어 있는 그림이다. 개인과 공동체, 부분과 전체가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델이다. 국익으로 대표되는 공익에 헌신하는 관료집단을 필요로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다양한 방향의 쌍방향 소통을 필요로 하는 모델이다.

넷째 모델은 국가는 존재하되 사회가 존재하지 않는 모델이다. 따라서 국익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지만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의 개별성과 집단이익의 다원성이 발달하기 어려운 모델이다. 이 모델은 관주도의 국가발전전략을 취하지 않을 수 없으며, 계몽군주나 계몽된 정치가 및 공익에 헌신하는 관료집단을 필수적으로 필요로 한다. 박정희식 모델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Ⅳ. 정치적 양극화의 극복 방안: 진보의 오류를 비판한다

이렇게 볼 때 사회적 양극화 만큼이나 정치적 양극화에 충분한 관심을 둔다면 어

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사회적 양극화를 막기 위해 노력했던 것 만큼 정치적 양극화를 지양하기 위한 노력은 일정한 성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 양극화의 문제를 위에서 설명한 네가지 모델로 이해할 때 정치적 양극화의 지양은 일단 정치를 국가전체를 단위로 하여 생각하는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 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가전체를 단위로 하여 생각한다고 할 때 그 법적인 기초는 바로 헌법이며, 그 정치사회적 기반은 헌법제정권력으로서의 국가자체가 된다. 이때의 국가는 동일한 정치적 의지로 결합되고 법적으로 승인된 정치적 집합체로서 국민과 동일시된다. 이것이 바로 공공성의 정치적 기초이며, 국민주권정치의 출발점이 된다.

이 모델에서 국회의원은 지역구의 사적인 이익을 넘어 국가전체에 대한 공공성을 기초로 하는 정치를 할 것이 요구된다. 프랑스혁명을 의심스런 눈으로 바라보았던 정치사상가이자 정치가였던 에드먼드 버크나 제헌의회의 국회의원들은 바로 이러한 정신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의원들이었다.

과거에 정치적 양극화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제기는 좌와 우, 진보와 보수 사이에서 중도적 입장을 표명하는 것으로 그치곤 하였다. '중도'라는 대립의 양끝으로부터의 절충한다는 것이지 '중도'의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 핵심은 바로 정치공동체로서의 '국가'에 있었고, 헌법에 있으며, 대한민국이라는 정치공동체의 혈연적-문화적 기반인 자연공동체 '민족'에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실로 국민통합정치의 기초였고 정치의 실존적 법적 기초였다.

이러한 생각속에서 오늘의 한국정치를 보면 어떻게 나타날까? 오늘날의 한국정치는 노무현 대 반노무현, 이명박 대 반이명박세력의 대립에서 보는 것처럼 정파간 대립의 수준에서의 양극대립적 양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예전에는 좌우이념대립적 양극화가 주조를 이루었던 것이 특정 정치인 및 정당을 중심으로 하는 정파적 대립의 형태가 전면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정파적 대립의 수준 / 체제이데올로기적 대립의 수준 / 국가전체의 수준으로 차원을 구분해 볼 때 국가전체, 곧 정치공동체의 수준은 소외되고 있다. .

다시 말해서 권력장악을 둘러싼 정치인간, 정당간 대립 속에서 국익의 기반으로서의 국가 (정치공동체)와 헌법은 존중되지 못하고 있으며, 현실정치는 그러한 국민정치, 나아가 민족정치의 맥락에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지배의 이데올로기나 정파대립의 수준에서 규정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은 보수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진보에 의해서도 자행되고 있다. 그것은 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에 의해서도 묵인되고 있는 일이다. 그것은 야당 뿐만 아니라 제3섹터라는 시민사회진영에 의해서도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인식을 오늘날 대한민국을 옥죄고 있는 금융위기 및 그에 따른 실물경제의 위기에 대해 적용해 보면 한결 이해가 쉬울 것이며, 그러한 위기에 대한 정치권 및 시민사회, 그리고 언론의 대응에 대한 일정한 판단기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투기자본이 대한민국을 흔들 때 진보 및 야당과 시민사회 등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을 주장한 것이나 투기자본이 외환시장을 흔들때 정부의 개입금지를 요구하며, '시장의 신뢰' 만을 반복적으로 되뇌인 것은 이들에게 국가를 지켜내고자 하는 목표의식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들에게는 시장은 존재할 지언정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거꾸로 국가를 도탄속으로 밀어 넣는 주장을 줄기차게 하곤 하였다. 그러한 주장은 투기자본을 포함한 금융자본에게는 유리한 것이었으며, 실제로 무디스나 골드만삭스 등은 같은 주장을 전개한 바 있다.

이들이 말하는 '시장의 신뢰' 에서 구체적으로 시장은 누구를 말하는가 ? 누구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말인가? 물론 이는 이데올로기적 미사여구에 불과하지만 그들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그러한 미사여구의 가면을 벗기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시장의 주체를 모두 망라하면 은행과 기업, 정부 등 공공기관, 그리고 가계의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가운데 정부는 시장의 행위자 이기도 하지만 시장에 대한 개입자이기도 하므로 제외하고, 이들이 '정부의 개입' 이 아니라 '시장의 신뢰' 를 얻어야 한다고 했을 때 그때 시장은 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은행과 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은행이 금융을 통하여 기업의 목줄을 잡고 있으므로 결국 시장의 신뢰의 핵심세력은 바로 은행이며 보험과 증권 등을 포함하면 금융자본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 등은 한때 정부의 개입에 대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지만 은행이 야기한 금융경색에서 초래된 실물경제의 위축이 극심하게 진행됨에 따라 이제는 더 이상 대기업이 정부의 시장개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는 않고 있는 상태이다.

말하자면 대기업과 금융자본의 입장은 금융위기 상황속에서 확연하게 구분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시장의 신뢰' 에서 시장은 은행과 대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이 가운데서도 은행을 우선적으로 가리키는 말인 셈이었던 것이다.

이 글의 논지로 되돌아가면, 진보와 야당, 그리고 시민사회가 결국 금융자본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주장을 스스로 하고 있었던 것이며, 그 결과가 실물경제의 위축이 발생하기 전에 자금을 풀었어야 하는 상황에서 금리인상을 주장하였고,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어떤 식으로든 패닉으로 번지지 않을 선에서 시장에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환율이 어떻게 되든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이는 국가에 대한 존중이 없었기 때문이었고, '시장의 신뢰' 라는 금융자본의 미사여구에 오염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외환시장개입을 반대한 그들이 나중에는 환율상승으로 인한 수입물가의 상승의 논리로 정부를 비판한 것은 빗나간 비판이었고, 자신의 일관성도 지키지 못한 비판을 위한 비판일 뿐이었다. 환율하락을 위한 외환시장개입을 반대한다고 해놓고, 환율상승으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을 들어 다시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이는 국가의 공공성과 공익에 대한 우선적인 배려가 존재하지 않았고, 오직 이명박정부에 대한 비판이면 모든 것이 용서된다는 식의 태도가 작동하였기에 발생한 결과였다. 물론 그러한 오판에는 이러한 사태전개의 본질에 대한 무지가 크게 작용한 것이지만 만일 공공성과 공익의 근거지가 되는 국가공동체라는 단위에 대한 문제의식만 확고히 서 있었다면 오히려 그러한 입점을 출발점으로 하여 사태이해를 위해 애를 쓰는 상황이 전개되었을 것이다.

이미 실물경제의 위축이 작년 9월경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였는데, 진보와 야당 그리고 시민사회에서는 일제히 금리인상을 말하였고, 한국은행은 물가인상론에 경도되어 10월 기준금리를 올렸으니 역주행도 이런 역주행이 없었다. 진보와 야당 그리고 시민사회가 지나치게 정파적 대립에만 기울어져 있었기에 발생한 일이었고, 그러한 정파적 대립을 초월할 수 있는 국가의식도 의지도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어디 그 뿐인가? 한국내 은행들의 해외차입금에 대한 국가지급 동의안이 S&P 등에 의해 요구될 때에도 진보와 야당 그리고 시민사회는 이에 대해 어떠한 비판도 가한 적이 없다. 진보가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그들은 국가를 자신이 원할 때 혹은 다른 세력들이 원하는 바를 관철시켜줄 때 브로커로서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었지만 정작 국가를 공공성과 공익을 위한 용도로 생각하고 실천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이다. 오히려 국가지급 동의안은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장관이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었고, 민주당은 이를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주었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지사에서 본사로부터 빌린 달러를 한국국민들이 지급보증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에 여야가 합의하여 강장관을 몰아치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다.

이명박정권을 비판하는 것은 비판하는 것이고 국익을 지켜내는 것은 지켜내야 하는 것이며, 계급적 관점을 지켜내야 하는 것은 또 다른 필요사항으로 파악하여야 했다. 정권을 잃은 후 이명박정권에 대한 비판의 연장선상에서 강장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게 된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강장관은 747에 묶여 초기에 수출주도적인 정책을 편 것이 사실이었고, 이것이 환율상승의 한가지 요인이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후 고유가 상황에서 강장관은 정책을 전환했고, 그것으로 강장관에 대한 비판은 종료되었어야 정상이다. 반이

명박 강공이 지나쳐 금융자본이 노동자와 서민 등 국민대중의 생존을 위협해도 이들은 시장의 신뢰를 말하며 은행이 원하는 금리인상과 투기자본이 원하는 정부의 외환시장개입 반대만을 되뇌었을 뿐이다. 만일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서 환율이 1500을 거쳐 삽시간에 1800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라. 그러면 곧장 경제는 극도의 혼란속에 처하게 되고 국가부도의 외환위기로 들어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진보와 야당 그리고 시민사회가 국익을 지켜내는데 앞장섰고, 정부가 매판에 기울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 역이었다는 점을 최근 금융위기 및 실물경제의 위기에 대한 그들의 처신에서 확인한다. 국익의 차원 뿐만 아니라 계급적 시각에서의 비판만 하더라도 이들은 모든 책임을 정부에게로 돌리는데 급급하였고, 금융경색의 주범인 금융자본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는 일이 진보, 야당, 시민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대신 그들은 모든 책임을 정부로 돌리고, 은행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조세정책부문에 대해서만 전략적으로 매달리는 방법을 취하였다. 그것은 본질은 건드리지 않고 주변만 가지고 자신들에 대한 국민적 지지만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진보의 생명은 이것으로 끝이 난 것이다. 국민정치의 관점에서도 계급정치의 관점에서도 진보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정당이 그랬던 것 처럼 진보도 다른 세력의 브로커로 전락하여 있었거나 무지하였거나 낡은 신념에 매달려 있었거나 중에 하나였을 뿐이었다.

이들이 그런 주장을 펴게 된 데에는 몇 가지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첫째, 이들에게는 자신들의 정치적 성공을 위하여 수행하는 정권을 장악한 세력에 대한 도덕적 비판 이외에 이를 초월하는 정치공동체로서의 국가수호의 의식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둘째, 이들은 금융자본에 의해 집중적으로 매수되어 그들의 브로커로서 그들의 뜻을 대변하는 데 급급하였다.

셋째, 이들에게 정치공동체로서의 국가수호의 의식과 의지는 존재하였으나 경제문제에 대한 지식과 통찰이 부족하여 자신의 의식 및 의지에 반하여 다른 주장을 하게 되었다.

겉으로는 이명박정권과 반이명박진영이 다른 명분을 내걸고 싸웠지만 실제로는 금융자본 대 산업자본의 대결구도속에서 정부와 반정부세력이 대리전쟁을 벌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금융자본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면, 한나라당은 산업자본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을 뿐이라 할 수 있다. 금산분리의 경우도 산업자본의 금융시장진출의 폭을 놓고 벌이는 싸움으로서 그 확대를 주장하는 것이 이명박정권의 입장이고, 이를 반대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인 것이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은 한편으로 경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서로 공통의 기반을 갖고 있기도 하다. 이들의 경쟁은 금융경색기에 대립적으로 나타나는 반면, 평소에는 같은 이해관

계속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금융경색기에 대기업의 붕괴는 하청업체의 연쇄도산으로 이어지고 국민의 실업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산업자본과 국민대중은 같은 이해관계에 있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평소에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은 서로 대립하기 보다는 협력하는 관계에 있고, 국가의 공공성의 시각에서는 국민대중과 대립된 입장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교차적 관계속에서 정치인들은 국민의 입장을 별도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정치공동체로서의 국가전체를 단위로 생각하는 정치가 존재한다면 그 정책이 바로 개별적인 관계를 넘어서 공공적 금융정책으로 안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양극화에 대한 관심의 부족 및 철저한 궁구의 부족으로 인하여 정치적 양극화에 대한 처방은 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처방만큼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적 양극화에 대한 처방은 고작해야 정치인들의 "중도" 이미지 조정작업에 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처방은 고도로 발전되어 있고, 빈부의 차이에 맞추어진 초점은 정치적 양극화현상에도 그래도 투영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사회정의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정치영역의 독자성이 지켜져야 하는데, 정치가 사회의 부수현상이 되고 그것이 사회의 양극화를 그대로 빼어 닮은 정치의 양극화로 귀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는 사회적 양극화의 대결이 이루어지는 대리전장으로 변질된 점도 있다고 본다.

사회적 양극화가 정치의 장에서 그 갈등이 증폭되어 정치적 양극화로 나타날 때 오히려 사회적 양극화의 불철저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것은 정치적 양극화의 구조 속에서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를 풀려고 할 때 정부와 정부의 조세정책 및 복지정책에 모든 초점이 두어지고, 그에 따라 정부와 여당의 이들 정책에 대한 포위전략의 과정에서 진보, 야당 그리고 시민사회는 정부 이외의 모든 세력들과 연대하는 모습을 취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반이명박세력은 계급적 비판의식을 상실하게 되고 시장을 매개로 금융자본과 연대하는 모순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된다.

사회와 정치의 영역이 각각 그 자율성을 지키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 양극화와 정치적 양극화에 대한 관심을 균형있게 유지할 때 사회정의 뿐만 아니라 국가의 공공성에 입각한 국민정치가 살아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사회정의를 촉진시키는 정치적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와 사회는 서로를 자신의 영역속으로 흡수하고 도구화하려 들기 보다는 각각의 존재영역을 인정하여야 한다. 정치의 자율성이 상실될 때 국민이 하나의 단위가 되는 정치의 기회도 사라지며 국민통합정치도 그 맥락을 상실하게 된다. 이때 국민은 뿔뿔이 여러 세력에 의해 분열되고 동원된 채 통일된 단위의 맥락을 상실한 채 파편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국민일반을 단위로 한 공공적 금융정책의 현실적 이념적 기반을 상실하게 되고 분배적 사회정의의 공공적 기반을 상실하게 된다. 국가공동체의 폭넓은 영역 가운데

사회와 정치의 균형이 깨질 때 건강한 심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콩팥의 문제로 인하여 건강자체를 잃게 되는 것처럼 국가사회도 최소한의 정치의 구비를 갖추지 못함으로 인하여 건강자체를 상실하게 되는 상태에 빠질 수 있다. 국가적 위기시에 그러한 문제는 증폭되어 나타나게 되며, 한편으로는 국가주권이 위협받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적 정책수립의 국민적 기반상실로 인하여 결국 국민은 고통속에 방치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사회와 정치는 각각 존중되어야 하며, 그런 점에서 정치적 양극화와 사회적 양극화는 동등하게 문제시되고 철저한 대안수립의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정권에 대한 비판과 국가의 공공성에 기반한 국익의 추구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정파적 대립에 몰입한 나머지 국가라는 정치적 단위와 국가를 구성하는 자연적 공동체인 민족이라는 혈연적 및 문화적 단위에 대한 고려에 소홀히 하게 될 때 국가는 정체성과 국익의 상실이라는 두 가지 손실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며, 이는 최종적으로 사회정의의 실현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